

주간 통일정세

2014-30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 北 '국방총 정책국' 대변인 담화(7/2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北 '국방총 정책국' 대변인 담화(7.20), 韓美 등의 北 미사일발사·포사격에 대한 '도발·위협' 지적에 "정정당당한 군사행동, 자위력 강화를 위한 합법적인 자주권행사"라고 강변 및 "우리 식의 보복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北, 한민구 국방장관 연일 원색 비난(7/30,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30일 서기국 보도에서 "한민구는 감히 체제의 생존이니 뭐니 하는 헛나발질을 하다가는 우리의 첫 번째 벌초 대상이 돼 국방부장관 병거지는 고사하고 명줄도 부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입부리를 놀려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서기국 보도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합참의장이던 한 장관이 "숨 넘어갈 듯 빈 입만 짹짹 다셨다"며 한 장관이 이달 초 연평도를 찾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을 강조한 것도 조롱함.
- 北단체 "UFG 강행시 청와대·백악관 타격목표 될 것"(7/31, 연합뉴스)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31일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괴뢰패당은 이번 연습에 참가하는 모든 침략무력, 남조선과 해외에 있는 군사기지들, 백악관과 국방성, 청와대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전략 및 전술로켓을 비롯한 강위력한 최첨단 초정밀 화력타격수단들의 목표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함.
 - 담화는 올해 UFG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처음으로 공식 적용되는 데 대해 "사실상 우리에게 핵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미국과 괴뢰군부 불한당들의 이런 광란적인 소동으로 북남관계는 또다시 과국의 위협에 처하게 됐으며 조선반도에는 당장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적대관념으로 모든 것을 대하지 말아야 한다(7/28,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28일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문제를 인내성있게 대할 것'이라며 '南 당국은 남북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우리(北)의 진정 어린 참가의사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적대관계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함.

- 北, 정전협정 기념식 비난...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8/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영원한 패전자, 산송장들의 쫓겨간 행보'란 제목의 '군사논평원'의 글에서 "7·27을 계기로 미국과 남조선, 그 추종국들의 망동(기념식 지칭)은 만천하에 저들의 수치와 참패만을 재확인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함.
 - 군사논평원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와 올해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맞아 진행한 기념행사와 참전용사 초청행사 등을 "구슬픈 장송곡 울린 기념공연", "유엔군 참전국에 섬겨 바친 추모 제상", "산 송장들에 수여된 파첼메달" 등으로 폄하함.

- 北, 美 MD체계 南 배치는 "군사적 패권 강화 속셈"(8/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군사적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흉악한 속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사드(THAAD)' 미사일은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것이라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의 말을 거론하며 "북한 미사일 위협설은 주변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포괄한다"며 "미국이 남조선에 고고도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힘.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서해 동창리 발사장 증축 내년 끝날듯"(7/29, 38노스)
 -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발사장의 증축 작업을 내년까지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29일(현지시간) 전망함.
 - 38노스는 지난 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발사장의 로켓 지지대에 위쪽으로 3개 층이 새로 생겨났으며 지지대의 형태로 볼 때 이 지지대가 완성되면 30m 높이였던 은하3호보다 더 큰 50~55m 높이의 발사체를 장착할 수 있다고 38노스는 분석함.
 - 발사대로 향하는 진입로 확장 공사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더 큰 로켓을 발사장으로 직접 옮길 수 있도록 새로운 연결 철로를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사이트는 덧붙임.

- 최근 북한 미그-19 전투기 3대 추락...노후화 심해(7/30, 연합뉴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30일 "비행 훈련에 나선 북한의 미그-19 전투기가 지난달과 이달 등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추락했다"면서 "북한이 옛소련에서 도입해 운용 중인 미그 계열의 전투기 노후화가 심하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힘.
 - 이 소식통은 "이달 초에도 황해도 곡산 비행장에서 이륙한 미그-19가 추락한 이후 해당 기종의 비행훈련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전함.

- 北, 300mm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7/30, 연합뉴스)
 - 북한이 7·30 재·보궐선거일인 30일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평안도 묘향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합참의 한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오늘 오전 7시30분과 7시40분께 묘향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2회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그러나 수 초 정도만 비행한 것으로 봐서는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또 오후 5시50분과 6시께 같은 지역에서 역시 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추가로 발사했으며, 각각 210여km와 130여km로 사거리가 불규칙했다"며 "210여km를 비행한 발사체는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개성공단 10주년 '남북 근로자 음악회' 추진(7/29,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말께 남측 연주자들이 방북,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야외 공연을 선보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연합뉴스가 밝힘.
 -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말부터 통일부, 현대아산과 음악회 개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순수한 민간 문화 교류라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北, 인천 AG 취재인력 파견 계획...ABU에 지원 요청"(7/3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취재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ABU 관계자를 인용해 30일 보도함.
 - ABU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24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취재인력 6명을 보내려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하며 북한이 "(취재인력) 초청장과 (경기) 일정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RFA가 전함.
- 남북 천도교, 개성서 공동행사 협의(7/30, 연합뉴스)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천도교가 동학혁명 120주년 기념 등 남북 공동 행사 협의와 관련해 방북을 신청해 승인했다"며 "정부는 비정치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 허용해 왔고 이런 입장에 따라 이번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 南주민 시신 1구 판문점 통해 인계 (7/30일, 연합뉴스)
 - 북한에서 발견된 남측 주민 시신 1구가 30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으로 넘어왔다고 통일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에 따르면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2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황해남도 옹진군 대기리 앞바다에서 남측 주민 사체 1구를 발견했으며 이를

30일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옴.

- 남한에서(전라남도 함평군 오리농가에서 4만 4,000여 마리 오리·닭 살 처분) 조류독감(AI) 발생, 7월 27일 KBS 방송 인용 보도(7.29, 중앙통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군 총정치국장 "자주권 위협하면 美 본토 핵공격"(7/28, 노동신문)
 -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연설에서 "미제가 핵 항공모함과 핵 타격수단으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 든다면 우리 군대는 악의 총본산인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하여, 태평양 상의 미제 군사기지와 미국 대도시들을 향해 핵탄두 로켓을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함.
 - 황 총정치국장은 "7월 27일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물리치고 민족적 존엄을 만방에 과시한 제2해방의 날"이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통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계승할 것을 강조함.
 - 이어 "인민군대를 최정예 혁명강군, 오늘의 김정은빨치산으로 만들겠다"며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1950년대 영웅전사들처럼 금수산태양궁전과 당 중앙위원회를 한목숨 바쳐 사수하는 김정은 제일친위대, 제일결사대가 되겠다"고 다짐함.
- 北, 재미 이산가족 "정치적 악용말라"...미국 비난(7/31, 조선중앙통신)
 -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31일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 하원이 재미동포 이산가족의 상봉을 촉구하는 '재미 이산가족상봉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흠어진 가족친척 상봉문제를 정치화해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악용하는 것은 날강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담화는 "해외동포들의 북한 방문과 송금까지 막고 조국 방문길을 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인도주의에 관심이 있다면 반공화국 모략선전과 북침 핵전쟁연습 등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외무성 성명(7.19)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7.20)를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4/512호'로 배포(7.28, 중앙통신·평양방송)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한미훈련 대응 정례화"...미사일 발사 계속할 듯(7/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도발자의 정체를 가리기 위한 술책'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은 명실공히 대조선 침략전쟁연습"이라면서 "미국의 전쟁행위에 대처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계속 다져 나갈 것이며 대응 행동도 연례화·정례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 논평은 "우리의 전술로켓 발사를 미국·남조선 해상합동훈련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어리석은 망언"이라며 "우리의 자위적인 전술로켓 발사훈련은 정당하고, 부당한 것은 오직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전쟁 책동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뿐"이라고 비난함.
- 北, 가쓰라-태프트 밀약 비판..."美의 침략기도 여전"(7/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최악의 역사는 절대로 덮어버릴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해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서로 공모 결탁해왔다"며 "세월이 흐를수록 잊혀지지도, 잊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민에게 원한을 남긴 미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함.
 - 신문은 "일제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토대로 을사 5조약, 정미 7조약, 한일합방을 날조해 우리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켰다"며 "하여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은 일제에 짓밟히며 피를 흘리게 됐다"고 지적함.

- 北통신, 美 종교자유보고서 비난...“위선의 극치”(7/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치졸한 광대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국무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2013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 억압을 지적인 것을 거론하며 "미국이 해마다 벌여놓고 있는 각종 명목의 보고서 발표 높음은 우리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려는 치졸한 광대극에 불과하며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함.
 - 이어 "이러한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종교의 탈을 쓰고 비법행위를 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우리의 징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함.

- 北 '미군 기지촌 성매매 비난...'인권유린국은 미국"(7/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벌거벗은 미국에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6·25 전쟁 이후 기지촌 성매매 문제를 주한미군의 '위안부 범죄사건'으로 주장하며 "미국은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을 운운하기에 앞서 저들의 인권유린 죄악부터 역사와 인류 앞에 속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논평은 최근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과 한국 정부가 6·25 전쟁 이후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업소를 관리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언급하고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하마스·헤즈볼라 연계설은 미국의 날조"(7/28, 조선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하마스와 무기거래 보도와 헤즈볼라를 지원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 고립을 추구해 꾸며낸 전혀 근거가 없는 황당무계한 꾀변이며 날조"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사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때 미국이 반대표를 던져 국제사회의 비난대상이 됐다며 "이에 당황망조한 미국은 우리를 저들이 규정한 이른바 테러단체들과 억지로 연관시켜 국제사회의 비난의 초점을 우리에게 돌려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함.

- '北 억류' 케네스 배 가족, 美정부에 송환노력 촉구(8/1,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전날 '미국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배씨의 발언을 보도한 뒤 그의 가족이 미국 정부에 "송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함.

- 北 "美 도발 계속되는 한 초정밀전술무기 더 만들 것"(8/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거듭 비난하고 미국의 '침략전쟁도발행위'가 계속되는 한 "고도로 정밀화된 전술유도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3일 '침략자들은 우리의 무자비한 타격에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란 제목의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침략 무리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싸움준비를 강화하고 로켓과학기술과 사격방법을 더욱 발전완성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응당한 권리이며 의무"라며 이같이 밝힘.

- 미국의 "조선반도에서 모든 침략전쟁 책동은 <유엔군>의 간판밑에 감행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7.29, 중앙통신·민주조선)
- 美의회 'VOA-RFA 개혁' 추진...VOA의 공식 임무를 미국 정책과 공공외교를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하기로 함(7/29, 연합뉴스)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日납치담당상 "이르면 8월말 北조사결과 나와"(7/29, 지지통신)
 -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1차 조사 결과가 이르면 8월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고 지지통신이 29일 보도함.
- "조선총련 간부 방북...대북제재 해제 후 첫 사례"(7/31, 산케이신문)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부의장을 지낸 고덕우 조선총련 서(西)도쿄 본부 위원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복수의 조선총련 관계자를 인용해 31일 보도함.
 - 신문은 고 위원장이 허종만 조선총련 의장보다 먼저 방북한 것은 조직 내부의 권력 구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조선총련 안에서 두 사람(허 의장과 고 위원장)의 동향을 둘러싼 동요가 확산하고 있다"는 조선총련 관계자 발언을 전함.

- 日 '조국해방전쟁승리' 61주년 경축 「총련」 중앙강연회(7/28, 조선중앙방송)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 방문단들(단장 : 리영생·김용대), 7월 31일 평양 도착(7.31, 중앙통신·평양 방송)

사. 대러시아

- 北, 러시아·주변국 군사훈련 옹호... "나토 견제 당연"(7/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응한 옛 소련권 군사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군사훈련 소식을 전하며 "나토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 강화는 당연하다"고 강조함.
 - 신문은 "얼마 전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참여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의 합동지휘참모훈련 '루베쥬 2014'가 진행됐다"며 최근 러시아 주도로 CSTO 국가들과 진행하고 있는 군사훈련들을 소개함.

아. 국제기구

- "아세안지역안보포럼서 北미사일 우려 의장성명 채택"(7/28, 교도통신)
 -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각료회의 의장국인 미얀마가 각국에 배포한 성명안은 북한이 핵포기를 약속한 2005년의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조기 재개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고 있음.
 - 이번 각료회의에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참가국들의 핵·미사일 문제 우려 표명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고 통신은 전함.

자. 기타 국가

- 호주, 북한 여행 주의보... "방북계획 재고" 권고(8/1, 미국의소리(VOA))
 - 호주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에 '주의' 경보를 내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일 전함.
 - 호주 정부는 북한에서는 여행객의 행동에 제약이 있고 서방과는 많이 다른 법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행 주의보 발령 이유로 들어 최근 호주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북한에서 임의로 구금·억류된 사건을 언급하며 "외부에서 사소한 일이 북한에서는 체포나 감금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스위스 이탈리아어지역 공산당 대표단, 7월 30일 귀국(7.30, 중앙통신·중앙방송)
-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대표단, 8월 1일 평양 출발(8.1,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정전협정 체결일에 6·25전쟁 '열사묘' 참배(7/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27일

오전 10시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참전열사묘'를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통신은 "애국가 주악에 이어 꽃바구니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됐다"며 김 제1위원장과 참가자들의 추모 묵상 이후 군 명예위병대(의장대)의 분열행진이 있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열사묘를 둘러보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는 유명무명의 열사들이 발휘한 영웅적 위훈이 깃들어 있다"라며 "전쟁 참가자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그들의 혁명정신과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가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7/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인민극장에서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힘.
- 통신에 따르면 황병서, 리영길, 현영철, 변인선, 서홍찬, 박영식, 럽철성, 조경철 등이 함께 관람함.

■ 北 김정은, 간부 기강 잡기...백두산 답사행군 지시(7/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전국 당 책임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이 시작됐다"라며 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전날 양강도 보천보에서 열렸다고 보도함.
- 신문에 의하면 특히 김기남은 김 제1위원장이 당 고위간부들의 답사 행군을 지시한 의도는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영원불멸할 생명선이라는 것을 뼈와 살로 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北김정은, 타일공장 시찰... "국산화로 생산 정상화하자"(8/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포시 천리마구역 강선에 있는 천리마타일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특히 김 제1위원장은 "공장에서는 타일에 대한 국내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게 생산량과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에도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함.
- 김 제1위원장의 타일공장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김정관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동행함.

김정은 동향

- 김정은 黨 제1비서, 7월 31일 새 살림집에 입주한 고산과수농장 종업원들(2,000여 세대)에게 '문화용품' 선물 전달(7.31, 중앙통신)
- 김정일의 '전 당 김일성주의화 방침' 제시('74.8.2) 4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8월 1일 4·25문화회관에서 김영남·김기남(보고)·최태복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8.1,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1,500여종·12만 4,000여점), 8월 1일~8일까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8.1, 중앙방송)
- 전국 당 책임일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8월 1일 백두산 밀영 고향집 방문(청봉·건창숙영지 및 사자봉 밀영 답사 등) 및 회상기발표모임 등 진행(8.1, 중앙통신)
- 김정은 당 제1비서, 천리마타일공장 현지지도 및 노력혁신자들과 기념촬영(8.3,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리재일, 한광상, 김정관 동행
- 김정일 저작 발표 40돌 관련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상정신적 기초도,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전투적 무기'라며 '조선노동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내어 나가자'고 주장(8.2,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 정부대표단(단장: 리수용 외무상), 8월 2일 아시아 나라들(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을 방문차 평양 출발(8.2, 중앙통신·중앙방송)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리수용 외무상 아세안 순방 시작(8/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리수용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2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함.
 - 당초 리 외무상은 이들 4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앙통신 보도에는 싱가포르도 방문 국가에 포함됨.
- 박봉주, 중석화협동농장·흡협동농장·농기계작업소 현지요해(8/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박봉주(내각총리)가 중석화협동농장(평남 대동군)·흡협동농장·농기계작업소를 현지요해했다고 전함.
 - 이에 앞서 용성-서포지구 살림집건설장들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협의회에서 살림집 건설을 하루빨리 끝내며 건설물의 질을 높일 데 대하여서와 연관단위들에서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 강구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8월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84.8.3) 3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8/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8월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84.8.3) 30주년 기념보고회가 김기남·로두철(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보고)·안정수(당중앙위 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함.
 - 또한 '8월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에는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고 더 좋은 소비품을 안겨주려는 김정일의 노고가 깃들어 있다'며 '모두다 1980년대의 정신과 투지로 분발하여 질 좋은 갖가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자'고 독려함.

- 北 정부대표단(단장: 리수용 외무상), 8월 2일 아시아 나라들(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을 방문차 평양 출발(8.2,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당 책임일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8월 3일 대흥단 일대와 무포속영지 답사(8.4, 중앙방송)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전승의 7.27이 있어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7/28, 조선중앙통신)
 - 28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의 자주적 삶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내달리는 대진군의 활력은 승리의 7.27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며 '김정은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전승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 조선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고 주장함.

-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애국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기치(7/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저작(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 2012.7.26) 발표 관련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기적 창조어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며 '김정일애국주의 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 나가자'고 주장함.

- 최후 승리를 위한 총진군에서 조선 여성의 혁명적 본분을 다하자(7/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1946.7.30) 68주년 관련 '여성들은 당과 수령을 양심과 의리로 받들어 나가는 충정의 인간, 견결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 아름다운 생활의 창조자들'이라고 지적하며 '당의 선군영도 따라 새로운 주체 100년 대진군에서 혁명적 기개를 더욱 높이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기신 강반석 여사(7/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강반석(김일성 母) 사망(7.31) 82주기를 맞아 강반석은 '조선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라며 '김일성을 낳아 키우고 그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긴 위대한 어머니였다'고 칭송함.
 - 통신은 최태복·최룡해·양형섭·최부일 등, 7월 31일 평양 칠골혁명사적지 강반석 동상과 만경대 묘에 화환 진정했다고 전함.

- 北 '당 김일성주의화' 40주년...김정은 유일영도 강조(8/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1면 사설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전 당 김일성주의화' 방침을 계승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 당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내세우며 "전 당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에 의하면 김 당비서는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혁명적 당의 생명이며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 담보"라며 "일편단심 당 중앙을 굳게 믿고 따르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해야 하겠다"고 역설함.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경공업에 '경쟁 열풍'...인기 브랜드 속속 등장(8/3, 연합뉴스; 조국)
 - 북한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경공업 부문의 품질 향상을 위해 눈에 띄게 힘을 쏟는 모습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일룡 내각 경공업성 부상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8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경공업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경쟁의 열풍 속에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힘.
 - 최 부상은 경공업 분야의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인기를 끄는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봄향기'와 '은하수' 화장품, '류원' 신발, '철쭉' 양말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으며, 또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가 "경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 열풍이 일어나게 하는 데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 월간지 '조국'은 북한의 양대 화장품 브랜드인 평양화장품공장의 '은하수'와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봄향기'가 경쟁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보통강무역회사가 진흙 성분을 활용해 개발한 '진주' 화장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소개함.

나. 주요 후속 조치

- 최근 경공업부문, '옥쌀생산공정 및 성형기' 등 선전(7/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 성과들이 이룩되었다'며 곡물가공연구소에서 개발한 '옥쌀(분말형태로 가루를 내어 쌀알처럼 성형하여 만든 제품) 생산공정 및 성형기' 등 선전함.
- "北, 5천원권 지폐 새로 발행...당분간 구권과 혼용"(7/30, 연합뉴스)
 -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30일 북한 무역 관계자의 전언이라며 "오늘부터 북한이 5천 원짜리 지폐를 새로 발행해 시중에 유통한다고 들었다"면서 "다른 지폐는 그동안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쓴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기존 5천원권에는 김일성 초상화만 있었지만 새로 발행한

최고액권 지폐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2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임.

- "北 아리랑 공연 내년부터 재개"(7/31,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여행 전문 고려여행사는 홈페이지에서 "2014년에는 아리랑 공연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담당자들에게서 확인했다"며 그러나 "내년에는 아리랑 공연이 열릴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함.
 - 이어 아직 북측으로부터 정확한 공연 날짜를 전달받지 못했지만 일단 내년 7~8월 관광상품에는 아리랑 공연 관람 일정을 포함했다면서 내년에는 광복과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기념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임.

- "北 농업전문가 6명, 독일서 유기농업 연수"(7/31,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농업전문가 6명이 독일에서 유기농업 등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교육받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함.
 - 북한 농업전문가들은 세미나에서 생산성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유기농 연구로 유명한 카셀대학과 유기농 농장·기업 등을 방문해 독일 농업현황을 살펴봤으며, 이 사업으로 북한 4개 협동농장의 농민·농업지도원 1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VOA가 전함.

- "농업생산을 추동하는 과학연구 성과" 선전(8/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농업과학원 농업화학화연구소의 벼모판 종합영양제의 공업적 생산 공정 확립과 다원소 광물질비료 및 수류진공펌프·원심분리기·진공건조기 등 "농업생산을 추동하는 과학연구 성과"를 선전함.

- 제4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선시에서 진행 예정(8/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전시회 기간에 회사소개, 상담회, 투자설명회 등을 조직하며 나선경제무역지대와 여러 나라 사이의 광범하고 다방면적인 상품 및 기술교류, 판로개척,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소개함.
 - 전시회는 무역, 경제, 과학기술분야에서 나라와 지역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통신은 선전함.

- 北 '8·3생활품' 생산운동 30주년... "제품 질 높아져"(8/3,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3일 '1980년대처럼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활발히 벌이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소비품의 이용자는 인민"이라며 "8·3인민소비품 생산에서도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이라고 밝힘.
 - 특히 사설은 8·3생활품 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8·3생활품 생산단위들에서는 질을 위주로 총화·평가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평양에서 '전국 8월3일인민소비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 1천500여 종, 12만4천여 점의 제품이 전시됐다고 전함.
 - 이날을 기념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3생활품 생산운동 발단 30주년 중앙보고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평안남도·평양시 등 여단 건설자들의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성과(7월 굴착과 성토, 타입계획 초과 수행) 선전(7.28, 평양방송)
- 황해북도 산원 (사리원시에 건립) 개원식, 7월 29일 강하국 (보건상)·박태덕 (황해북도당 책임 비서)·임훈 (道 인민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7.29, 중앙통신·중앙방송)
- 천연강옥으로 강공한 각양각색의 보석들(청옥·홍옥의 장식품 등) 선전 및 평양시 만경대구역 태양열설비보급사에 다양한 형태·규격의 보석제품 생산 단위 조성 소개(7.29, 중앙통신)
- 제13차 전국 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 개막(7.29, 중앙통신)
- 평양시 석탄공업관리국, 7월 인민경제계획을 117%로 초과 수행(8.2, 중앙방송)

다. 경제 상황

- 北 '다효능' 머드화장품 선전... "화상 치료도 효과"(7/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북한에서 서해의 머드 성분을 추출해 개발한 새 화장품 '진주'가 인기있다고 소개하며 "광량만 유향 감탕(진흙)은 면역기능, 노화방지뿐만 아니라 신경통·비만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이용돼왔다"며 "피부치료 효과도 오래전부터 지적돼왔으나 염도가 높아 화장품으로 개발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함.

- 조선신보는 "화장품이면서도 치료 효과가 높으므로 화상이나 벌레 물린 데 외상치료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다른 화장품과 구별되는 것은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전함.

■ 국제커피기구 "북한 주민 1년에 평균 커피 7잔 마셔"(7/30,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30일 국제커피기구(ICO)가 자체 통계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커피를 연평균 1만9천 포대(60kg짜리)씩 수입했다고 전함.
- ICO 보고서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의 연평균 커피 수입량이 1천 포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하며 2000년대 들어 커피 수입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ICO는 평양 등에 서구식 커피숍이 여러 개 등장했음에도 가격 때문에 커피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라고 설명함.

■ 나선시 북한産 체코 맥주 인기...“평양서도 찾아와”(7/30, 미국의소리(VOA))

- 체코 유명 양조회사의 지원을 받아 북한 나선시에서 생산된 체코식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함.
- 북한에 파견된 즈부 포테즈의 양조 전문가 토마스 노보트니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맥주를 좋아한다"며 "평양 시민들이 단지 이 맥주를 맛보기 위해서 나선을 찾는다고 한다"고 말함.

- 평양시 석탄공업관리국, 7월 인민경제계획을 117%로 초과 수행(8.2,중앙방송)

라. 대외 경제관계

■ 北, 올 상반기 중국산 곡물 수입 작년 절반으로 줄여(7/30, 연합뉴스)

- 30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6월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곡물은 모두 5만 8천387t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상반기 12만 4천228t의 47.0%에 불과한 규모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올해 상반기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곡물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은 밀가루(4만

142t)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고, 쌀과 옥수수는 각각 1만 3천831t과 3천420t으로 특히 옥수수는 작년 수출량(1만 7천655t)의 20%에도 못 미쳤다고 뉴스가 보도함.

- "러시아 연해주 파견 北 노동자 증가"(8/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연해주 정부가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연해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모두 6천610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함.
 - RFA는 연해주가 올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음에도 북한 노동자 수는 오히려 늘었으며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진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함.

- 북·중, 옌지-나선 관광직통버스 운행 개시(8/3, 중국신문사)
 - 북한과 중국이 두만강 하구의 양국 교역 거점인 지린성 옌지(延吉)시와 나선시를 연결하는 관광직통버스의 운행을 시작했다고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3일 보도함.
 -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이 버스를 이용해 나선시에 가려면 북한 원정리 출입국사무소에서 북한 측 버스로 갈아타야 했지만, 새 직통버스는 환승이 필요없어 옌지에서 나선까지 총 4시간이 소요된다고 통신은 소개함.
 - 북한과 이번 사업을 합작한 중국 측 여행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나선시 관광상품(1박2일)과 연계해 관광직통버스를 매주 화요일~토요일 운행할 계획이며, 옌지-나선 관광직통버스 운행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옌지시 여유국(관광국) 왕옌보(王延波) 부국장은 "북한 나선시 관광부문은 개방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북한 측이 중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직통버스 운행을 건의해 성사됐다"고 말함.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남녀평등' 공표일 맞아 '슈퍼우먼' 역할 강조(7/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북한 여성들을 ▲당과 수령을 양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충정의 인간이자 견결한 혁명가 ▲사회주의 수호와 조국번영을 위해 피와 땀을 바쳐가는 열렬한 애국자 ▲사랑과 헌신으로 사회주의 대가정을 가꿔가는 아름다운 생활의 창조자 등으로 치켜세움.

- 그러면서 여성들이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조국의 힘찬 전진을 위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北, 청소년에 교양 강조... '이색풍조' 차단 노력(7/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평양 청년동맹회관에서 전날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신념교양·계급교양·도덕교양에 관한 청년동맹 일꾼들의 연구토론회'가 열렸다고 전함.
 -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상사업의 하위 분야로 제시한 것으로 '4대교양'으로 통하며,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4대교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신문은 전함.

마. 사회 동향

- 외부세계 '장벽' 허무는 北... 주민-외국인 접촉 늘려(7/30,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0일 캐나다 비정부기구(NGO) '평양 프로젝트'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외국인과 북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보도함.

- 이 프로그램에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6~7개국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교수와 학생 30여명이 참가해 중국 선양에서 출발해 평양, 개성, 원산, 청진 등을 돌며 금수산태양궁전, 홍남비료공장 등 북한의 주요 시설과 선전물 등을 탐방하며, 참가자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창 밖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VOA가 전함.

- '전승컵 전국 태권도 강자경기대회', 함경남도 함흥에서 개막(7/28, 조선중앙통신)
 - '전승컵 전국 태권도 강자경기대회', 7월 28일 태종수(함경남도 당위 책임비서)·전광호(도인민위원장)·김경호(조선태권도위원장/개막연설)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함경남도 함흥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힘.
- 北에도 복날 보양식 '열풍'... "보신탕집 초만원"(7/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연중 제일 더운 계절인 삼복에 들어서면서부터 평양시안의 단고기집(보신탕집)들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고 전함.
 - 조선신보는 "삼복을 맞아 시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단고기 요리를 더 잘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 품평회가 진행됐다"라며 "품평회에는 매 구역의 단고기 요리품평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식당들이 자기 구역을 대표해 참가했다"고 소개함.
- "5cm이하 힐은 안 신어"...북한서도 '킬힐' 인기(7/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0일 평양발 기사에서 '보통강신발공장'을 소개하며 최근 북한의 젊은 층에 화려한 디자인의 신발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함.
 - 보통강신발공장의 리미옥(44·여) 지배인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여성들은 뒤축이 5cm 이하인 낮은 구두는 안 신는다"라며 이런 선호를 반영해 구두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함.
- 북한도 폭염...함흥 최고기온 35.2도(8/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일 함경남도 함흥의 낮 최고기온이 35.2도로, 8월 1일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았다고 보도함.

- 방송은 1일 북한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며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차양모와 양산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함.
- "北 평양 인구 300만 돌파 추정"(8/2,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컨설팅기관인 '데모그래피아'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평양 인구가 306만 4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전함.
 - VOA에 따르면 데모그래피아의 2012년 보고서에서 평양 인구는 286만 5천 명이었으며 지난 2년 동안 평양 인구가 약 20만 명 증가한 셈이라고 밝힘.
- "평양 프로레슬링대회에 밥 섹 등 격투기선수 참가"(8/2,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2일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에 관여한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의 언급을 인용해 이달 30~31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프로레슬링 대회에 이종격투기 대회 K-1에서 활약한 밥 섹과 제롬 르 뱅너(프랑스), 피터 아츠(네덜란드) 등 8개국의 이종격투기·프로레슬링 선수 17명이 참가한다고 전함.

- 위원회·성·중앙기관 일꾼 수영대회, 7월 28~31일 창광원 수영장에서 진행(7.31, 중앙통신)
- 최근 北의 각 도·시·군들에 '미래원이 일떠서고 있다'며 '미래원들은 과학기술지식 보급의 거점으로서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로 붐비고 있다'고 선전(7.31, 중앙통신)
- 문수물놀이장(평양 대동강변, 연건평 10만 9,000㎡)의 '하루 평균 1만 명 이용 등 각계층의 남녀노소 초만원' 선전 및 '김정은 노고' 칭송(8.1,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6자수석 "대북 압박정책 불변...추가제재 언제든 가능"(7/31,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국외자(global outlier)'가 되고 있다"며 현행 대북압박 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이나 핵보유국을 천명한 헌법 개정 등 북한이 보여 온 행동은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특히 "북한은 6자회담을 비밀 핵무기 개발 지속을 위한 보호막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이행 조치들에 초점을 맞춘 6자회담이 아니라면 관심이 없다"고 일축하는 한편 "6자회담 관련국들 사이의 지속적인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나. 미·북관계

- 美하원 대북제재 법안 통과... '알맹이'는 빠져(7/29,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으며, 본 법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을 어렵게 해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크게 퇴색해 제재의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과 '알맹이'가 빠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음.
 - 다만 이번 법안은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상원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마쳐야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됨.

■ 美정부, '본토 핵공격' 北위협에 "선동적 수사"(7/29, 연합뉴스)

-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백악관과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을 겨냥해 핵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고 위협한데 대해 "선동적 수사"라고 일축하며 "이는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 백악관은 이날 황 총정치국장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논평을 거부한다"고 밝혔으며, 이와 같은 미 국무부와 백악관의 반응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되풀이되는 위협적 수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음.
- 또한 미 국무부는 북한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기 거래 시도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으로부터의 글로벌 안보 및 확산 위협을 강조해왔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국제 공동체를 통해 북한의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 태평양군사령관 "北 미사일 발사 우려"(7/31, 연합뉴스)

-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제재를 해야 하며, 특히 미사일이나 핵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한다"고 말해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음.
- 그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기술 향상을 위한 조치로 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가 없다"면서 "북한은 세계를 향해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국제 안보환경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분석했음.
-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우려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 '별일 아니다', '또 몇 발 쏘네'하고 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을 비핵화 하고 현행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중·북관계

- 中·北 냉기류…北, 정전일에 '중공군 침전' 언급 인해(7/28, 연합뉴스)
 - 북한은 매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해마다 중공군의 참전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고 북한 매체들도 '중·북 혈맹'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잇달아 쏟아내곤 했는데, 올해 들어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의 6·25 참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주목됨.
 - 김정은 체제 출범 첫해에는 최룡해 당시 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인민의 아들딸들이 생사고락을 같이했다"고 말했으며 특히 60주년이던 작년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평안남도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참배하는 등 중·북 혈맹이 과시됐었음.
 - 하지만 올해 북한은 중공군의 참전 사실 자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서 중·북 우호조약 체결 기념일인 지난 11일에도 양국의 친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음.

라. 일·북관계

- 조총련 간부 방북…대북제재 해제 후 첫 사례<산케이>(7/31,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31일 북수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총련 부의장을 지낸 고덕우 서(西)도쿄본부 위원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으며, 평소 가까운 친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가고 싶다는 의향을 주변에 드러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 신문은 고 위원장이 허종만 조총련 의장보다 먼저 방북한 것은 조직 내부의 권력 구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조총련 내에서 두 사람(허 의장과 고 위원장)의 동향을 둘러싼 동요가 확산하고 있다"는 조총련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 보도대로라면 고 위원장은 최근 일본이 일·북 간 인적 왕래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등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한 것을 계기로 기존의 제재 대상자가 북한을 방문한 첫 사례가 되며, 한편 조총련은 고 위원장의 방북 여부 등 관련 내용에 관해 답변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마. 기타

- 아세안지역안보포럼서 北미사일 우려 의장성명 채택(7/28,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8일,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자 북한이 참가하는 얼마 안 되는 다국간 회의이며 미국,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을 우려하는 의장 성명이 채택될 전망이다 보도했음.
 - 이번 각료회의 의장국인 미얀마가 각국에 배포한 성명안은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한 2005년의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당사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교도통신은 밝혔음.
 - 또한 이번 회의에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참가국들의 핵·미사일 문제 우려 표명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며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진전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북 외무장관 회담을 하는 방안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北청천강호 운영사 제재...안보리 결의없는 첫사례(7/29,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파나마에서 붙잡힌 북한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 관리회사(OMM)'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처음으로 결의안 과 의장성명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음.
 - 이는 안보리 결의상 의무 불이행으로 제재 대상에 추가된 최초의 사례라고 외교부가 29일 밝혔으며, 유엔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그와 관련된 북한의 기업·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왔음.
 -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제재위가 안보리에 추가 대상을 건의했으며 일정 기간 반대가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침묵절차(silence procedure)'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러시아의 태도 변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논의' 북한제재위 소집(7/30, 연합뉴스)
 -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30일, 유엔 결의안 1718호에 따라 90일마다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문제와 함께 이행 강화 차원의 권고사항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북한제재위원회의 90일 보고 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현지 시간)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다고 전했다.
 - 북한 제재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6월26일(스커드 미사일 2발), 7월 9일(스커드 미사일 2발), 13일(스커드 미사일 2발), 26일(스커드 미사일 1발)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탄도 미사일 기술사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안보리 이사국들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회의에서 대응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안보리가 그동안 주로 대응해 온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과 비교할 때 도발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당장 추가 조치가 나오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러시아에 분명한 메시지 보내야"...한국에 공조요청(7/2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에서 금융제재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피터 헤럴 제재담당 부차관보는 29일, 우크라이나 사태 및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 관련 기관을 상대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설명하고 한국의 동참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헤럴 부차관보의 방한 협의에 대해 "결실 있는(fruitful) 협의를 했다"면서 "특정 국가를 거명하고 싶지는 않으며,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이 동참해 러시아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를 확실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 또한 이 관계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북핵 6자 회담 등의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조심스럽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러시아 침공(Russian aggression)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길 희망한다"면서도 "한국 정부 입장은 한국에 물어보라"면서 즉답을 피했음.

- 한민구 "美기지 이전 국민과 약속...계획대로 한다"(7/29, 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장은 29일, "미군기지 이전은 한·미 간 그리고 국민께 약속한 부분"이라며 미 2사단의 한강 이북 및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 문제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적인 견해를 피력했음.
 - 용산기지가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 주한미군 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미 2사단과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지만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시기의 재연기에 합의하면서 연합사의 서울 잔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미국 측은 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장관은 "소위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에 변동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동일 범위 내에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고민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미, 서울서 소규모 원자력 협상...쟁점 지속조율(7/29,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2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소규모 인원이 참석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쟁점 조율을 시도했는데, 양측은 지난달 미국에서 10차 본 협상을 개최하면서 사실상 올 연말이 개정 시한인 점을 고려해 소규모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기로 한 바 있음.
 - 양측은 우리 측 핵심 관심사항인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 등의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으며 원전 산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견 접근을 한 상태로 양측간 협력을 풍부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그러나 농축·재처리 권한 행사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비확산 정책 차원에서 사안별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협정 구조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원전 연료의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 차원에서 농축·재처리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한·중 관계

- 이석현 "中, 사드 배치에 민감한 반응…불쾌감도"(7/28, 연합뉴스)
 - 최근 여야 의원들과 중국을 방문한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28일, "우리 측 의원이 중국 대외연락부와 외교부 고위 관료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묻자 상당히 민감한 반응과 불쾌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 중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을 자극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런 일로 인해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원치 않는다는 중국 측 발언을 소개하며 "사드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 부의장은 말했다.
 - 또한 과거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국내 일각의 견해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고위 관료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전에 한국이 핵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면 이에 대한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며 사실상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 중국, 11월 APEC서 '한중FTA' 타결선언 희망(7/30,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30일, 중국이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자유 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우리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 그러나 "최근 12차 협상 때 (협상이) 조금 후퇴한 측면이 있다"며 양국 정부가 좀 더 정치적 의지를 갖고 가속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으며,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3일 정상회담을 통해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를 약속했었음.
 - 조 차관은 이번 접촉과정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한·미 동맹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라는 점도 서로 확인했다고 전했으며 또한 중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의미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평가와 지지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다. 한·일 관계

- 한·일 어업협상 이르면 8월 초순 재개될 듯(7/29,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는 29일, 지난달 하순 서울에서 열린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양국 어선들이 자국수역으로 철수해 조업 중인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일본 수산청과 이르면 8월초에라도 협상을 재개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합의안 도출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국은 7월 하순에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개최 장소 등을 놓고 조율이 안 돼 회의개최가 늦춰지게 됐으며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갈치잡이 조업조건 완화와 할당량 등 우리의 요구안과 일본 측의 제안 등을 연계해서 협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하지만 일본이 우리 수역에서 199t으로 증푼한 고등어 잡이용 어선의 한국 수역에서의 영구적 조업 허가권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어선은 모드 130t급이어서 이번에도 타결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라. 미·중 관계

- 美해군참모총장 "中 탄도미사일 전력, 미국에 위협"(7/29, 연합뉴스)
 - 조너선 그리너트 미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중국과 가까운 곳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첨단 크루즈 및 탄도 미사일이 향후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미국의 온라인 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이 28일 보도했음.
 - 미 국방부도 최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사거리가 1천 500km 이상인 기동성 탄두를 탑재한 '항공모함 킬러'인 동평-21D 미사일이 서태평양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비롯해 대규모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음.
 - 국방부 보고서는 또 중국 미사일들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역내 공군기지와 병참시설 등의 타격용으로 적합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탄도 미사일과 지상 및 공중 발사 크루즈 미사일 등이 결합할 경우 역내 전역의 목표물 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태평양군사령관 "림팩 감시 中정보수집함 문제없다"(7/30, 연합뉴스)
 -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는 29일(현지시간), 새뮤얼 로클리어 미 태평양군사령부 사령관이 림팩 합동군사훈련 과정에서 미중 간에 진행 중인 '미등록 정보수집함' 논쟁에 대해 우려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절하 했으며 이 문제를 더는 확대하고 싶지 않은 의도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로클리어 사령관은 "림팩 훈련이 중단되거나 훈련의 진행에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 작전과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은 국제법의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용인되며, 각국이 가지는 고유권(fundamental rights)"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또 앞으로 몇 주 후면 중국군도 남중국해에서 20척의 함정을 동원해 '흰고래(White Whales)'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훈련을 할 예정이라며 미국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훈련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국방패널 "中과 北비상사태 대응계획 긴밀 소통해야"(8/1, 연합뉴스)
 -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존 아미자이드 전 중부사령관이 공동의장을 맡은 미국 국방패널(NDP)은 31일(현지시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개연성 있는 비상사태는 전쟁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내부 위기"라고 밝혔다.
 - 이에 NDP는 비상사태 발생시 미국 본토와 아시아 역내의 미 지상군을 한반도에 신속 전개하고 핵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기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중국의 정치·군사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 비상사태에 따른 작전 환경과 관련해 공통의 구상을 만들어 오판의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북한 내의 핵심 목표들을 겨냥한 정밀무기를 신속히 배치해 핵 긴장을 완화하고 민간의 희생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 미·일 관계

- 오노데라 방위상, 美핵항모에 착륙...日각료는 처음(7/30, 연합뉴스)
 - NHK는 30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오키나와(沖繩)

근해의 태평양에서 진행된 미국·일본·인도 3국 공동훈련에 참가 중인 핵항모 조지 워싱턴호에 착함(着艦·항공기가 항공모함에 내려앉는 것)했으며 이는 일본 각료로는 처음이라고 보도했음.

- 오노데라 방위상은 "동아시아 안정에 미군은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라고 강조했으며 또 훈련 중인 미·일 함선이 정보를 공유하며 경계 및 감시 활동을 하는데 대해 "집단 자위권과 개별 자위권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일체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음.
- 지난 1일 일본이 미·일동맹 역지력 강화를 명분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 이후 양국 동맹의 결속력을 과시하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으며 오노데라 방위상은 지난 9일 미국의 핵무기 관리와 핵억지 정책을 총괄하는 전략군사령부를 현직 방위상으로는 처음 방문한 바 있음.

바. 미·러 관계

- 러, 말레이기 피격 책임 지우는 美에 강력 반발(7/28,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자국 국경 검문소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찰단을 초청했다며 미국은 OSCE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음.
 - 또한 하루 전 러시아 외무부는 논평에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그러들지 않는 중상모략으로 판단할 때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공개적 거짓말에 점점 더 의존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미국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했음.
 - 앞서 백악관은 대(對)언론 브리핑에서 "확보한 정보에 근거할 때 여객기 격추 사건의 책임은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을 했으며 케리 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반군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과 분쟁의 강도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
- 美 "러시아, 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 위반했다"(7/28, 연합뉴스)
 -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신형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는 등 '중거리 핵무기 폐기협정 (IRNFT)'을 위반했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서한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 1987년 미국과 구 소련이 맺은 IRNFT는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및 배치를 금지한 것으로 냉전 시기 군비 경쟁을 종식한 중요한 협정으로 꼽히는데, 최근 몇 년 새 러시아가 이 협정을 깨뜨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의 제기와 관련, 러시아의 다양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슷한 미사일은 미국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색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음.

■ 푸틴-오바마 통화…우크라 해법 '동상이몽 여전'(7/28, 연합뉴스)

- 백악관과 크렘린궁은 1일(현지시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두 정상은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우크라이나 상공에서의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 직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객기 추락 사실을 전해준 바 있으나 사건 책임 소재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간 공방이 격화한 이후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와 관련 두 정상은 하루 전인 31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참여하는 3자 접촉그룹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회담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크렘린궁은 덧붙였다.

사. 중·일 관계

■ 중국 동중국해에 작전지휘센터 설립…"日 견제용"(7/29, 연합뉴스)

- 대만의 자유시보가 캐나다 군사전문 잡지인 칸와디펜스리뷰를 인용해 중국이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에 '동중국해 연합작전지휘센터'를 설치 했으며 이를 통해 일본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동중국해 일대에 대한 군사적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음.

- 이 작전지휘센터는 중국 해군과 공군의 동중국해 감시 기능을 통합해 자국이 지난해 11월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주변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군은 300여 대의 전투기를 동중국해와 가까운 지역에 진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음.
- 또한 이 센터는 각종 수집된 정보를 중국관 '국가안보회의(NSC)'인 국가 안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기능도 부여받았으며 대만 언론은 중국군의 이와 같은 최근 움직임은 일본 자위대의 동중국해 활동을 직접적으로 견제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음.

■ 아베 "무력으로 영토 바꾸려는 의도 경계해야"(7/29, 연합뉴스)

- 아베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린 카리브 공동체 14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일부 지역의 영해와 영공에서 무력과 강압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영토 확장에 대한 견제 발언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아베 총리는 일본이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해 진취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영토 문제는 무력이나 위협이 아닌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 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나서는 일본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음.
- 아베 총리는 이들 나라에 대한 공식적인 공적개발원조(ODA)가 끝났다 해도 다시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들 국가에 대한 재원조를 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이러한 의지는 최근 카리브 국가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 후쿠다 전총리 비밀방중…중일 정상회담 모색<日언론>(8/1,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1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가 지난달 27일 전후로 비밀리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으며 아사히(朝日)신문은 후쿠다 전 총리가 중국 공산당 지도자와 회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또한 요미우리신문은 후쿠다 전 총리가 11월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아베 총리와 시 주석간 중·일 정상회담을 하는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음.
- 일본 내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계 매체 일본신문망은 후쿠다 전 총리가 지난달 27일 중국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는데, 이 매체는 자민당 내 거물급 '친중파'로 통하는 후쿠다 전 총리가 아베 신조 총리의 '특사'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 일·러 관계

- 일본, 對러시아 추가제재...“자산 동결할 것”(7/28,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크림 병합 또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정세 불안에 직접 관여 했다고 판단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일본 내에 있는 자산 동결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스가 장관은 일본이 크림 산(産) 제품의 수입제한 조치를 단행하고, 유럽 부흥개발은행(EBRD)의 대 러시아 신규 대출을 중지하는 유럽연합 (EU)의 결정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으며 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명단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일본의 이번 제재는 미국과 유럽이 이미 시행중인 내용으로 일본의 독자적 제재는 없으며 이는 결국 서방과 대(對) 러시아 정책에서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의 상대인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린 결정으로 풀이됨.
- 러, 우크라 사태 관련 日 추가 제재에 강력 반발(7/29,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일본의 추가 제재 조치와 관련해 발표한 논평에서 "러시아는 이 조치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크게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비우호적이고 근시안적인 행보라고 평가한다"고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음.
 - 외무부는 "일본의 추가 제재는 어떤 단서로 포장되든 불가피하게 포괄적 양국 관계에 해를 끼치고 양국 관계를 후퇴시킬 것임을 일본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일본은 앞서 지난 4월 말 러시아 정부 인사 23명의 일본 방문을 금지하는 1차 제재를 발표한 바 있음.

-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은 북방영토(쿠릴열도) 협상을 중단하겠 다는 것이냐"고 일본의 제재 동참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일본의 이번 추가 제재 동참으로 인해 양국 간 쿠릴열도 분쟁 해결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 아베 "푸틴 방일 미정...종합적으로 검토 할 것"(8/1,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예정대로 추진할지에 대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러시아와의 쿠릴 4개섬 반환 협상에 강한 의욕을 보여 온 아베 총리는 작년 4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했고 러시아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푸틴의 일본 방문 시기는 올해 가을이 될 것으로 전망됐었음.
- 한편 중남미를 순방중인 아베 총리는 아베 총리는 대(對) 러시아 추가제재 여부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세의 추이에 입각, 선진 7개국(G7) 등 국제 사회와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김매기도 못 끝내 수확량 차질 우려(7/2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7월 20일까지를 농촌동원 기간으로 정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투입했지만 중앙의 설익은 지시로 아직 김매기조차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그나마 가동을 하는 공장은 '혜산신발공장'과 '혜산방직공장'뿐이라며 "그 외 가동을 못하는 공장 기업소들은 노동자들을 모두 협동농장에 내보내 현지에서 숙식을 하면서 농사일을 돕도록 하고 있다고 전함.
 - 함경북도의 한 농업부분 관계자는 "아직 김매기가 끝나지 못한 농작물은 감자와 메주콩"이며 메주콩은 수요가 점점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강냉이보다 훨씬 중요한 농작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김매기를 끝내지 못해 가을철 수확량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김매기가 아직 끝나지 못한 원인으로 중앙의 일처리 방식을 지적했는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협동농장의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무시한 채 논밭 물주기와 '풀거름 생산' 지시를 마구 내려 노력이 분산되면서 아직까지 김매기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북, 휴대전화 방해전파 다시 발사(7/3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함경북도 회령, 온성과 양강도에 불법휴대전화 방해전파를 간헐적으로 발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야간을 위주로 그 빈도가 점차 늘고 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불법휴대전화 방해전파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약 5분, 7분간씩 수시로 쏘고 있다고 설명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2006년부터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 방해전파를 쏘아 변경지역의 중국인들에게도 피해가 가면서 북한 인민보안부와 중국 공안국 사이에 지난 2011년 중국 공안당국이 대량의 전파탐지 장비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국경연선에서 모든 통신수단, 휴대전화 방해전파를 쏘지

않는다는 협약이 이미 맺어져 있는 상태라고 밝힘.

- 이를 두고 주민들 속에서는 "전과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휴대전화가 중국을 통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비롯해 "중국에서 보내준 탐지장비들이 다 낡아 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이르기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설들만 무성한 상황임.

■ 북, 중국에 '비사그루빠' 파견(7/30,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이 중국에 '비사회주의그루빠'를 직접 파견해 중국 장기거주 북한 주민들의 감찰활동을 진행 중에 있음.
- 단동의 한 대북소식통은 "비사그루빠가 일주일 전에 도착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조선 무역대표 중에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면서 북한당국이 극비리에 비사그루빠를 파견했다는 점을 강조함.
-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올 3월에도 암행감찰반을 파견하여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을 감찰한 바 있는데,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중국에 암행감찰요원들을 파견한 것은 김정은의 공안통치가 한층 강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소식통은 "비사그루빠 감찰요원들은 본국에서 지령을 받고 중국까지 출장을 왔기 때문에 감찰성과를 올려야 한다"면서 "운 나쁘게 이들에게 꼬투리를 잡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를 입기 마련"이라고 말했음.
-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재원들은 꼬투리잡히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일부는 적극적인 향응, 선물 공세를 펴는 등 다양하게 대응한다고 함.
- 지난주부터 활동을 시작한 비사그루빠는 요원들의 숫자와 활동 지역, 활동기간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북한주민들이 가장 많이 주재하고 있는 단둥과 선양, 다롄, 베이징 등이 주요 감찰지역인 것으로 추정됨.

■ 北 '미군 기지촌 성매매 비난...'인권유린국은 미국'(7/31, 연합뉴스)

- 북한은 31일 노동신문에서 '별거벗은 미국에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6·25 전쟁 이후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성매매를 인권유린 범죄를 주한민군의 '위안부 범죄사건'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이에 대해 우선 사과할 것을 촉구함.
- 또한 6·25 전쟁 이후 벌어진 미군 범죄와 미국 내 성범죄 통계를 열거하며

"겉으로는 번창한 것 같지만 인간의 모든 권리가 여지없이 유린 말살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이 조선 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시효란 있을 수 없고, 미국은 왜 우리 민족이 미제 침략자를 소멸하자면서 대결전을 준비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재미 이산가족 "정치적 악용말라"...미국 비난(7/31,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31일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 하원이 재미동포 이산가족의 상봉을 촉구하는 '재미 이산가족상봉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재미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담화는 "해외동포들의 북한 방문과 송금까지 막고 조국 방문길을 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비난했으며, 인도주의 문제가 북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헐뜯는 것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이미지를 흐리고 민족 내부에 불신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변했음.
- "미국은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매달릴수록 세계 면전에서 인도주의 말살과 인권유린의 왕초로서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올 상반기 중국산 곡물 수입 지난해 절반(7/31, 미국의 소리)

- 곡물 생산량 증가로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모두 5만 8천여t으로 집계됐으며, 밀가루가 4만여t, 쌀과 옥수수가 각각 1만 3천t과 3천420t
- 이는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양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예년보다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은 최근 중국을 '젓대없는 나라' 라고 비난하고 러시아와의 경협을 확대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임.

- 북 다리붕괴 차량 추락 여성 50여명 익사(7/31,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7월 27일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다리 붕괴 사고로 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시아프레스 북한 내부 취재협력자가 지난 31일 전함.
 -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27일 '전승절' 기념 행사에 동원된 여맹원 50여 명을 태운 차가 다리를 건너는 순간 다리가 붕괴,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장마철이라 강물이 불어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음.
 - 같은 지역의 다른 주민은 거의 같은 정보를 이야기하면서도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당간부는 1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이 주민은 "이 사고로 양강도 당위원회는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직원은 무조건 중국 인민폐 30위안을 내도록 명령해, 모두가 냈다. 사고에 대해 소문을 확산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 북, 카카오톡 사용자 '간첩'으로 취급(7/3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보안당국이 카카오톡을 쓰는 사용자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하고 있음.
 - 카카오톡을 이용해 평안북도 내부 주민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있는 한국의 30대 탈북자 현 모 씨는 북한 보위부가 최근 국경일대에서 '카카오톡' 사용자를 잡기 위해 혈안이라고 전함.
 - 북한에도 이러한 카카오톡이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한 현 씨는 중국에서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깔아 들여보낼 수 있으며, "국경일대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단속에 쉽게 걸리지 않고, 낮은 신호에도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북한 내부 협조자들과 통하기가 수월하다"고 설명함.
 - 현재 국경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카카오톡을 장착한 스마트폰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중고 스마트 폰은 300달러 이상에 거래되고 있음.
 - 하지만, 카카오톡을 이용해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연락이 가능하다는 걸 눈치 챈 북한 보위부가 강력 차단에 나섰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은 입을 모으고 있음.
 - 평안북도 신의주와 연락하고 있는 한국 내 탈북자 양모씨도 "보위부가 손전화를 단속하면 우선 바탕화면에 카카오톡 앱이 깔리지 않았는지 눈을 밝힌다"면서 "만일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견되면 간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북 주민 소득 대부분 시장서 얻어"(7/3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경제에 관한 대담에서 평양을 제외하면 북한 주민들이 평균 소득 중 70% 이상을 당국의 배급이 아니라 시장과 관련한 활동으로 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자문위원은 추정치임을 전제로 북한 주민의 평균 소득 중 70% 이상이 시장에서 나오며, 상점 또는 상인 간 경쟁까지 생겨날 정도로 시장의 역할이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힘.
 - 특히 북한에 널리 보급된 휴대전화가 각 지역 시장에서 물건 가격을 비교하거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공헌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함.
 -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자문관은 북한에서 특권 엘리트 계층을 상대로 호화 사치품을 파는 시장까지 형성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상품공급체계가 매우 허술한 등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함.

- 국무부, 북한에 케네스 배 석방 촉구(8/1, 미국의 소리)
 -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조속한 석방을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함.
 - 배 씨 가족과 30일 얘기를 나눴으며 배 씨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 러 연해주 파견 북 노동자 20% 증가(8/1, 자유아시아방송)
 - 올해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가 6,610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8%에 이른다고 연해주 정부(공식 홈페이지)가 1일 밝힘.
 - 이로써 러시아 내 최대 북한 노동자 파견 지역인 연해주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지난해(5천600명)에 비해 18% 증가했음.
 - 연해주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가 감소했지만 북한 노동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지역 내 산업계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추세가 뚜렷한 상황임.
 - 러시아 내 전체 북한 노동자(2만 1,447명, 2013년 기준) 4명 중 1명꼴로 연해주로 파견됐으며 이들은 주로 건설, 벌목,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음.

- 북한은 건설, 벌목 등 단순 노무직뿐 아니라 점차 고급 기술인력도 러시아에 파견하려는 의도도 보이는데, 립청일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가 지난 달 중순 연해주 의회 고르차코프 의장을 만나 정보통신과 전통의약 분야 협력을 제안했음.
- 미 민간단체 '평양시 인구 3백만 돌파'(8/2, 미국의 소리)
 - 미국 민간기관 '데모그래피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양의 인구는 3백6만4천 명으로 추산됨.
 - 이는 2년 전 이 단체가 추산했던 평양 인구 2백86만 명 보다 20만4천 명 증가한 것임.
 - 북한에서는 공업도시 함흥이 인구 75만 명으로 5백91 위, 청진이 65만 명으로 6백66위로 전 세계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포함되었음.
 - 북한의 대도시들이 전체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인구밀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양은 평방km당 인구 1만7천4백 명으로 34 위에 올랐고, 이밖에 함흥이 51 위, 청진이 2백74 위를 기록했음.

2. 북한 인권

- 미국 "북한, 종교활동 엄격 제한...종교자유 없어"(7/2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이래로 계속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s)로 지정함.
 - 북한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당국 감시체제 하의 일부 공인된 단체를 제외하고는 종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또 "탈북자와 선교사, 비정부기구(NGO) 등의 보고에 따르면 종교 활동에 참여해 개종하거나 외국인 또는 선교사들과 몰래 접촉하는 주민들은 당국에 체포된 뒤 사형을 포함해 엄벌에 처해진다"고 비판했음.
 - 다만 북한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고 시의적절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종교활동 관련 주민 체포 및 처벌 실상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 美하원 대북제재 법안 통과... '알맹이'는 빠져(7/29,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 법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게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번 법안은 무부로 하여금 주민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한 제재 대상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해 이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치적인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됨.
 -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법안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 내의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 의회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이런 종류의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언급함.

- 영 NGO, 북 빵공장 건립 모금행사(8/1,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의 대북지원단체 북녘어린이사랑(Love North Korea Children)이 북한에 6번째 빵공장을 세우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를 2일 런던에서 개최함.
 - 이날 행사로 마련된 기금은 북녘어린이사랑이 북한에서 운영할 새로운 빵공장을 세우는 데 쓰일 예정임.

3. 탈북자

- 국정원, 탈북자 조사실 개방형 바꿔...인권보호관 임명(7/28,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자 조사 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시설과 업무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힘.
 - 국정원은 인권침해 오해 불식을 위해 조사실을 개방형으로 바꾸었으며, 탈북자 중 70% 이상이 여성인 점을 고려해 여성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 탈북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며 직원에 대한 인권의식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 개최...탈북자 문제 논의되나?(7/28, 데일리NK)
 - 외교부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와 태국 등 메콩강 주변국 장관과 장관 대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4차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진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느냐 하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양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논의는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 내년부터 탈북자 지원사업 줄줄이 폐지(7/29, 서울신문)
 - 정부가 28일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통일부의 탈북자 특화 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6개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탈북 산모를 위한 도우미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탈북 여성을 위한 쉼터 지원 등 탈북자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차례로 폐지됨.
 - 이들 사업을 유사한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 통합해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탈북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탈북 산모를 위한 도우미 지원 사업은 내년에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통합되면서 폐지되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탈북 여성을 위한 쉼터 지원 사업은 일반 여성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흡수됨.
 - 탈북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탈북자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등 올해 신설 예정이었던 탈북자 복지서비스 지원 역시 예산 문제로 무산됐음.

- 탈북자들 "북한 인권탄압, 국제사회가 해결 앞장서야"(7/30, 연합뉴스)
 - 한국외대 국제여름학기(International Summer Sessi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 문제: 진전을 위한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북한인권 문제 초청강연'이 개최됨.
 - 김영순씨를 비롯해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NK인사이드 대표, 중국 내 탈북자 지원 비정부기구인 'HHK' 팀 피터스 대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강연함.
 -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말하는 국가안보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그저 정권 유지 수단에 불과하다"며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김씨 일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려면 국제 사회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조명철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복송 중지해야"(7/30, 서울경제)
 - 조명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복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조 의원은 최근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탈북자 2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3대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강제 복송된 탈북민들이 처할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가 처형과 고문이 기다리는 지옥의 함정으로 몰아넣는 비인도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음.
 - 이를 "외면한 채 한중 관계의 발전을 논하는 것은 언어적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중국정부가 탈북민 강제 복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베를린서 독일 내 탈북자 실태 토론회(7/30,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인을 주축으로 한 독일 최초의 대북 인권단체 '사람'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독일인, 한인2세, 한국 유학생의 단체 'HEKO'가 8월 2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Nicolai Sprekels) 대표는 독일인들에게 북한 실상을 더 많이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힘.
 - 그는 독일인들이 생각보다 북한 문제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최근 독일 내 탈북자 관련 연구를 한 HEKO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덧붙였다.
 - HEKO의 조슈아 윤(Joshua Yoon) 대표는 한 독일 대학의 학생들과 공동으로 연구한 독일 내 탈북자들의 실태에 관해 보고할 것이라고 전함.
 - 연구 대상이 된 독일 정착 탈북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언어 장벽과 신변 위협을 우려해 독일 내 탈북자나 한인 공동체 등과 교류가 없는 고립된 생활로 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음.

- 남북하나재단, 탈북자정착 돕는 전문가 본격 양성(8/1, 데일리NK)
 - 남북하나재단이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강원도 화천 제2하나원에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가 자격과정'을 개설하고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착한(着韓)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초급 1차 과정을 진행했음.
 - 이번 과정은 하나센터와 대안학교, 그룹 홈 등 각종 시설 근무자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정부 및 민간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되며, 재단에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자격시험, 보수교육 등을 통해 해당 전문가의 자격을 인증해 주는 최초의 공신력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가 자격 과정임.

- "미국이 나서 탈북자 강제북송 막아야"(8/2, 미국의 소리)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블로그에 멜라니 커트패트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공동으로 올린 글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에 비판함.
 - 중국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인권 탄압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강제북송은 난민협약 가입국 의무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음.
 -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미국의 멕시코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과 비교하며 정당화하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멕시코 당국은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거나 처형하지 않는다고 반박함.
 - 차 석좌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곧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촉구했음.

- 탈북 일가족 네명 난민지위 획득 미 입국(8/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난민지위를 획득한 탈북 일가족 네 명이 지난 31일 미국에 도착했음.
 - 9개월 가까이 태국 주재 유엔난민시설에서 심사를 받아온 이들은 최종 난민심사에서 통과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인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음.
 - 미국 동부에 정착하게 되는 이들 가족은 미국정부의 난민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정착단계를 밟게 될 예정임.
 - 함경북도 출신인 이들 가족은 50대의 부부와 10대의 아들 두 명으로, 중국에서 10년 동안 은신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4월 탈북 여성 1명이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가족단위로는 이번이 가장 큰 규모임.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일본,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 8월말 예상(7/30, 미국의 소리)
 - 일본 '지지통신'은 29일 개최된 일본 정부와 여야 정당의 납치 문제 관계 의원들로 구성된 '납치 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에서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음.
 - 납치 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는 납치 피해자들을 위한 새 지원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잠정 승인했음.
 - 후루야 장관은 납치 피해자가 추가 귀국할 경우에 대비해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일본 정부는 다음 달(8월) 5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리는 납치문제 대책본부에서 새 지원제도를 공식 결정하고,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전시납북자 문제 처음 입 연 北, "납북 사실 없다"(7/31, 뉴데일리)
 -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해오던 북한이 지난 4월 9일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제출한 문서를 통해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음.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유엔 실무그룹에 54건의 '전시 민간인 납북자 생사확인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고, 유엔 실무그룹은 이 가운데 3건의 진정서를 제네바 북한 대표부에 전달했음.
 - 가족회는 지난 24일 북측의 입장이 담긴 유엔 실무그룹의 회신을 이메일로 받았다고 31일 밝혔음.

- 일본 민간단체들, 아베 총리에 북송 일본인 가족 영구 귀국 요청(8/1, 미국의 소리)
 - 일본의 5개 민간단체들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낸 공동성명에서 북송 일본인 처와 그 가족들의 영구 귀국을 촉구했음.
 - 이 단체들은 지난 5월 북·일 합의에서 납치 문제뿐 아니라 북송 일본인 처 등

- 일본인이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음을 지적하고 이들의 귀국을 위한 노력을 요청함.
- 또 이들의 입국과 영주권 발급 등 귀국 절차도 서둘러줄 것을 요구했음.
 - 이들은 북송 일본인 처와 가족들이 북한의 감시 때문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일본 정부가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정부, 7억7천만 원 결핵치료약 대북지원 승인(7/28, YTN)
 - 통일부는 민간단체 유진벨 재단이 7억7천만 원 상당의 결핵 치료약품을 평양 등 북한 결핵센터에 보내는 것을 승인했음.
- 카리타스, 북 결핵요양시설 2곳 완공(7/29,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구호단체 독일 카리타스가 북한 강원도 문천과 천내 두 곳에서 진행 중이던 결핵환자 요양시설 건립사업이 마무리됨.
 - 새로 만든 결핵환자 요양원은 2012년 홍수 때문에 파손되었던 곳으로, 문천의 경우 50명, 천내는 20명의 결핵환자를 수용해 치료할 수 있음.
 - 천내 요양시설은 건물 전체를 다시 짓고, 문천의 것은 일부를 고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
 - 볼프강 게스트너 대북사업 담당관은, 결핵환자 요양시설 건립 지원사업과 함께 질병관리시설 건립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장기사업계획에 따라 함흥지역에 세워질 이 시설은 완공이 되기까지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환자를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교육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독일 NGO, 북한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지원(7/31, 미국의 소리)
 - 독일의 비정부기구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GNE (Gesellschaft für Nachhaltige Entwicklung)는 북한 농업과학원 전문가 6명을 초청함.
 - 이들은 독일에서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배웠으며, 31일까지 머물며 농업관련 기관 및 대학을 방문해 독일의 농업정책 및 기술에 대해 배움.
 - 또한 GNE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18년까지 북한 농업과학원과 함께 북한의 영농기술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이 사업은 북한에 새로운 영농기술과 농장 현장 조사체제를 도입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확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평양과 황해남도, 평안북도, 강원도에 시범농장을 운영하면서 유기농법을 이용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할 계획임.
 - 또 평양에 농업증산센터와 농업현장연구센터를 설립해 농업 연구와 교육도 실시할 예정임.
 - GNE는 이 사업으로 북한 내 4개 협동농장의 농부 400여 명과 농업정책 관계자, 800여 명의 농업지도원, 현지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CFK "9월 중순 북 병원에 수도 설치"(7/3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비정부기구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 CFK)'은 오는 9월 중순 북한 황해북도의 병원 두 곳에 수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지난 6월 방북 현장 점검에서 북한 황해북도 지역의 병원 및 보건 시설 26개 정도를 둘러보고 온 결과 환자들을 위한 식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병원들에 태양열 판과 물 저장탱크, 태양열 펌프, 수도관 등 수도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북한 결핵 환자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 이 기구는 9월 중순 방북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양동이 모양의 정수기, 또 식수 사업을 위한 다른 물품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결핵 및 간염을 전문으로 하는 북한 의료진을 교육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평양 결핵 연수원이 완공됐기 때문에 기존의 연수 의료진 외 더 많은 미국 의료진과 보건 전문가들을

모집 중에 있다고 전했다.

- 스웨덴, FAO 대북 사업에 22만 달러 지원(8/1, 미국의 소리)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소피아 웬글린 대변인은 식량농업기구 (FAO)의 대북 사업에 미화 22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 자금은 북한 내 식량안보와 농업기술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스웨덴 정부는 올해 초에도 유엔과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사업에 미화 57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7월 말 현재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에 배정한 예산은 모두 지급되었음.

- WFP 7월 대북 식량 지원 24% 증가(8/2, 미국의 소리)
 - 세계식량계획(WFP)의 7월 대북 영양 지원이 전 달에 비해 24% 증가했음.
 - 세계식량계획 안젤리 멘도자 대변인은 7월에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84만 명에게 1,816t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6월 60만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1천468t을 분배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이지만, 전년도의 2천880t과 비교하면 무려 59% 감소한 것임.

8. 북한동향

-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을 통해 북한이 중동 하마스·헤즈볼라와 연계돼 있다는 언론 보도와 미국 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이 우리(北)에 대한 국제적 고립을 추구하여 꾸며낸 날조'라고 주장(7.28, 중앙통신)
 - 미국의 모략책동은 가자지역에서 반인륜적인 학살만행으로 수세에 빠진 이스라엘을 비호두둔하고 있는 저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해보려는 불순한 기도가 깔려있음.
 - 남조선에게 각종 살인전쟁장비들을 넘겨주는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이며 테러의 왕국, 국제테러의 주범임.

- 美 국무성의 '2013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내용 중 '북 종교문제 특별우려대상국' 포함 관련 '우리(北)의 영상을 깎아 내리려는 치졸한 광대극에 불과하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적대행위가 계속 되는 한 우리(北)의 징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7.30, 중앙통신/치졸한 광대극)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